

2015
09

제69호

제281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이어령-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손가락 두 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 놓을 때
작은 땀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물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59

2015.09 제69호 제281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CONTENTS

02	개 회 사
04	본 회 의
05	하 트 이 슈
10	의원논단
18	생생인터뷰
20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9	5분 발언
34	상임위원회
40	의원주장
41	현장의정
42	제281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46	연구 · 토론
50	포토의정
59	의회사무처 소식
60	느낌충남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디자인 · 제작 | 제일문화사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학생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우리 道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자유학기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道 의회는 지난 24일 道 교육청과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하는 어려운 과정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적자원 개발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청·지자체·지역시민단체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만 초점을 둔 부익부 빈익빈의 잣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 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농어촌의 학교 중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고 자란 고향에서 교육받을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터를 넘어 지역의 뿌리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학교는 늘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참 한국인으로 양성하는 제2의 가정입니다. 道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지역 강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과 차별화 전략 등 작은 학교 살리기의 대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찌는 듯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어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와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은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지난 25일에 북한의 지뢰 도발 유감표명,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 해소,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에 전격 합의하며 대화의 정례화와 체계화에 공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경제협력사업과 통일 조국을 위한 준비를 위해 우리 道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충남도내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보령댐 저수율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물론, 발전용수 등 공업용수조차 자발적 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현재 물통합관리 기본방향을 수립중이며 버려지는 물과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 부족현상이 되풀이되는 근본적 걱정 거리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물 대란의 전조가 뚜렷한 현 상황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지혜로운 ‘국민 물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는 일류 문화이고, 백제인은 으뜸 세계인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단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수학 여행지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세계무대를 겨냥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올해만 두배 가량 늘었고, 추후 다섯 배 가까이 관람객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에 ‘준비된 백제 교양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백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 및 가뭄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제281회 임시회 도민과 동거동락



-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 제시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20개의 조례·결의·동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281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지역 현안을 담은 5분 발언,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심의가 이어졌고, 도내 산재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도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정활동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총 30건의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등이 총망라돼 해결점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김기영 의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앞으로 도민 복리 증진 등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유치

내년 4월 동북아 각 지역 지방의회 의장 한자리에...김기영 의장 유치 일등공신
9월 3~4일 제6회 포럼에 참석해 충남 문화와 역사 전파...문화교류 교두보 마련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게 됐다. 김기영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포럼에 참석해 충남의 문화와 역사 우수성을 동북아지역 의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유치전을 펼쳤다. 그 결과, 참석한 5개국 12개 단체가 내년도 충남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에는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만큼 문화교류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점을 고려할 때 홍보 효과 등 관광객 유치를 톡톡히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의장은 “동북아시아 각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돈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저지주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향후 문화, 관광, 경제 등 분야별 상호교류와 협력 다지기로

9월 14일 충남도의회가 미국 뉴저지주의회와 문화, 관광, 경제 등 분야별 상호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조길행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뉴저지주의회 고든 엠 존슨 하원의원, 팰팍시 이종철 부시장, 크리스토퍼 정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3년 우호교류협력을 미국 뉴저지주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존슨 하원의원이 자매도시 체결을 제안했고, 2014년 11월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약 2년 6개월 간 논의 끝에 양 의회가 우호교류를 위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날 서명한 우호교류협약서의 주 내용은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교육, 관광, 환경보호, 청소년 등에 관한 사안을 지원 및 보증해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양측에서 열리는 대형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분야의 교류 활동을 장려해 실무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망언 규탄 결의문 채택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본 역사 도발 잠재워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
역사 도발에 관한 재발 방지 위해 필요...일본대사관과 외교부에 전달

충남도의회가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기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빗댄 칼럼을 인터넷판에서 삭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본의 역사 도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신문 사설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역사 인식에 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결의문 채택이 필요했다는 것. 이기철 의원은 “산케이신문의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볼 때 기본 아닌 기초도 안 된 수준”이라며 “냉전 와해 이후 세계화 시대에 사대주의로 물고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러한 망언에 대해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 사과하는 길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결의안 채택

총 1600억원 부담 등 교육청 교육 재정에 악영향...교육 질 저하 우려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정부의 교육재정 방안 철회 촉구

충남도의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하여 학교 비중보다 학생 비중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충남의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함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충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은 물론 도 단위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충남교육의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방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농혁신 등 정책특위,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3농혁신, 안면도, 황해경제자유구역, 도계분쟁 등 분야별로 나눠 분석 대안 제시
부진 사업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도정 핵심 사업 돌파구 마련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가 3일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정책 추진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농혁신, 안면도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공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농혁신의 경우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것이 한계점으로 꼽혔다. 특위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3농혁신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 줄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진·평택 도계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낙운 위원장은 “특위가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부가 업무를 한 번 더 챙기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진사업을 점검하여 독려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특위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맥상에 빠져 있는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 하는 데 집행부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특위가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복만 의원 선출

재적위원 36명 가운데 35표 얻어 1년간 역할 수행

충남도의회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복만 의원을 선임했다. 김복만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6명 가운데 35표를 받아 1년간 예결특위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새롭게 선임된 예결특위는 향후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또 도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제2기 예결특위 위원은 총 20명이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태 의원 선임

향후 동료 의원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검토 등

충남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동료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원들의 행동 가짐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의원들은 평소 품위 유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특위가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은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내년 9월 9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유익환

제1부위원장

미운오리인가?
소규모학교는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추억을 거슬러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울 때쯤, 한 친구가 학교를 가보자고 제안한다. 마침 휴일이라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어린 시절 추억의 모습은 사라지고, 학교 운동장만 그대로 있었다. 그 크던 운동장이 왜 이리 작아졌는지. 창문 넘어 교실 안을 보니 예전 교실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한 학급당 8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들이 너무 많아 뒤로는 통행조차 할 수 없었던 교실. 앞뒤 책상이 붙어 항상 불편한 자세를 취했던 생각이 가물거린다. 지금 교실을 보니 “애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겨우 10명 남짓한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저 출산, 시골 학생 수 감소 등 말만 들었는데, 현장을 직접 보니 실감이 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당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001년 700 개교에서 2004년 1038개교를 넘었다. 지난해 1753개교로, 2001년 대비 무려 1053개교가 늘었다. 문제는 충남 전체 학교의 33.6% 수준인 204개교(초교 159, 중교 45)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속한다는 점이다. 충남의 학생 수는 2004년 31만9010명에서 지난해 28만7481명으로 무려 3만1529명이 줄었다.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니 복식 수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시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5365개 학교가 통폐합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충남에서도 같은 기간 406개교가 통폐합됐다.

향후 정부는 통합학교에 약 3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통합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따라서 통폐합되는 학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폐합 움직임에 충남교육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충남교육의 족쇄로 작용할 2015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이다. 이 중에서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 비율은 낮추는 대신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높이도록 한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이 시행 되면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다. 교직원 정원 역시 학생 수 기준이 적용돼 도농복합지역에서 교직원 정원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현장에서는 학급당 인원 수 증가,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또 교육환경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현상도 볼 뻔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육 양극화 방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진정한 균형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 불균형이나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리는 균형 교육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 하는 지혜를 조금 더 발휘할 때이다. 미운 오리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는 것처럼 교육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할 것이다.





이종화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충남에 민간공항을!

전국 광역 도(道)에는 있지만, 충남지역에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민항공항이다. 민항공항이 없다는 것은 곧 삶의 질 후퇴로 이어진다는 여론이 짙다. 실제 도민들은 공항 접근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아우성이다.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까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릴 만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5월18일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의 발전과 도민 불편을 해결하고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것이 바로 서산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다. 비행단 기존 활주로에 터미널 시설 등을 갖추자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김포·김해 등을 제외한 지방공항 11곳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충남지역에 민항공항을 유치해야 할 이유는 있다. 먼저 기존 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기에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공항 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약 40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공항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다. 경제성도 BC 1.99로 상당히 높았다. 한서대가 2007년에 예측한 항공수요만 보더라도 2020년 국내선 34만명, 화물 6천t, 국제선 16만7천명의 항공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항접근에 따르는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까지 더하면 답은 나와 있다. 전문가들 역시 민항을 서산 전투비행단에 유치할 경우 약 70분가량



단축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 절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내포시대를 연 충남도,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산업벨트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 증폭, 충남도민들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 등은 민항유치의 가능성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중국과 지근거리가 있다는 점은 민항유치 명분에 방점을 찍는다. 청주공항의 경우 개항 1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만성 적자로 공항의 존폐위기까지 맞았던 강원도 양양공항의 경우 강원도와 양양군이 중국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대표적으로 성공한 지방공항으로 우뚝 섰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항공 여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제항공여객은 5천677만명이었고, 국내항공여객은 2천46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일찍이 주변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유치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한 막대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민항유치의 필요성 및 공항유치 타당성 등 전략적 논리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또 항공여객 수요분석 자료 등을 지속해서 분석, 국토부와 협의하여 나간다면 민항유치는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충남은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항유치는 꼭 필요하다. 충남은 아직 교통 기반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 충남에 민항 유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잘 개발한다면, 어느 민항보다 더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인의 첫 번째 관문으로 충남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김종문
의원



마련
사회적 경제
충남에 맞는
활성화 방안

충남은 어느 지자체 보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고 많은 지자체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착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새로운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길만이 우리 충남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토론 발표를 마쳤다. 여기 착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천안FC 사회적 협동조합은 축구, 즉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또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천안FC 사회적 협동조합 또한 이익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맞으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비영리기업"이며 "스포츠사회적기업"이다. 수익금의 70%는 사회(취약계층)에 환원하고 나머지 30%는 기업에 재투자 되고 있다. 천안FC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인가받은 위탁교육기관이며, 또한 2012년도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전국 최초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다. 현재 천안FC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교폭력 대안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동아리 위탁 교육,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학교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등 충남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천안의 초·중·고교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선수로 등록하여 데뷔전을

치렀는데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사회적 공인이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했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조동화 시인은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된다 하였다. 들판에 피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 갈 수 있다. 천안 FC사회적 협동조합은 축구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사회에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착한 기업**이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 건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고 꽃을 피우는 유일한 희망이다.

천안 FC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건전한 미래사회를 열어갈 착한 사회적기업의 초석이 되고, 또한 더 한층 발전하고 성장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큰 몫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조미환

의원

다녀와서
임란공신 위령제
에
일본 대마도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2015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소속회원 40명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마도 조선인 귀 무덤 연구발표 및 부산과 대마도 역사현장 방문과 더불어 대마도 상대마 카와우치 귀 무덤 현장에서 '임란공신 귀 무덤 위령제'를 봉행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시 잔악 무도한 일본의 왜장들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 심지어는 조선의 장군들과 의병장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베어가서 전리품으로 삼고 무덤을 만들었다. 금번 처음으로 위령제를 봉행한 대마도 귀 무덤은 2014년 발견되었는데 상대마도 카와우치라는 한 작은 마을의 숲속에 남아있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의 돌무덤이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 고니시군대가 부산진을 정벌하고 8,500여명의 부산양민들을 살육하고 귀를 잘랐다. 뿐만 아니라 200여명의 부산 양민들을 생포하여 일본 대마도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대마도 귀 무덤은 부산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부산인들이 희생되었음을 짐작케 했다. 왜구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선조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대마도 귀 무덤을 보면서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저 부끄럽기만 했다.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땅인지 선조들께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일본에는 대마도 귀 무덤 외에도 교토 귀 무덤, 오카야마 코 무덤 등이 더 있다하니 임진왜란 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우리 선조들이 희생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먼 나라인 것 같다.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발달된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며 상호 교류하였지만, 중세부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일본은 강화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수시로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아왔다. 특히, 1910년부터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는 인권유린, 문화재 약탈, 전쟁과 징용, 강제 위안부 등 침략자가 되어 이 나라 전 분야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은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 참으로 분통하고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 일본의 아베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위대가 국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2차 세계 대전 전범국으로서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보다는 군사대국의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행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는 참으로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역사인식의 퇴보와 자위대 강화는 세계의 평화공존에 대한 역행이요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나치전범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재판정에 세웠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지 않고 증거물로 보존하여 후세에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인에게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세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대하신 우리 선조들은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조국강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다. 우리 후손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우리는 해방 70돌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분통하고 억울한 희생을 교훈삼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침략국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종화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건설 경기 회복이다. 기업과 산업단지 유치 등 크고 작은 건설 경기의 회복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9대 도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 위원장은 충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위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이 위원장의 과거 행보는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움직였다. 2014년 제10대 의회에 재입성한 이 위원장은 지역과 도민의 '안전'과 '건설' 등을 담당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환경해권 개발, 내포신도시 활성화,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품 단지 등 충남의 대형사업과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상임위를 위해 잘못된 것에 대한 질타와 대안 제시는 물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감시할 것은 감시하되 부채 절감, 교통 인프라 구축, 각종 도시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선 집행부와 협력해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INTERVIEW

앞으로 2년간 상임위 활동방향은?

건설 경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정여건 역시 악화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된 게 사실이다. 왜 충남에 SOC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타당성을 마련할 것이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으로 중국과도 거리가 가장 가까워 대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데, 이런 강점을 부각시켜 SOC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 것이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을 만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도민이 늘 접촉하는 교통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습 정체구간의 정체 해소 등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 합의체로 원만히 운영하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 의회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 의견청취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겠다.

INTERVIEW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시급한데?

우리 상임위가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이 많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으로 활성화된 반면 청양, 공주, 부여, 논산 등은 침체된게 사실이다. 지역간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다.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기성도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관련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지역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상임위가 노력할 것이다.

INTERVIEW

안전이 사회적 이슈이다. 강화 대책은?

방재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고 보상 등에 대한 사안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후속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아울러 소방 인력과 장비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임무인 소방서 직원의 처우 개선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장비 확충과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직원 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진단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것이다.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 추진'에 집행부의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신르네상스사업 재도약을 위해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 되도록 지원하겠다. 집행부가 추진 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대산 화학단지, 자동차 부품 시설 등의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INTERVIEW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내포신도시의 2단계 개발이 한창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인 신도시는 환황해권의 발전 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배후 거점 도시로 성장 할 것이다. 단순히 내포신도시만의 발전이 아닌 홍성과 예산 발전, 더 나아가 충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행길 것이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INTERVIEW

끝으로 지역민에게 한마디!

6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99



※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회의록 참조



김 홍 열 의원

Q1 충남도의 핵심정책인 3농혁신과 중앙정부가 내 놓은 농업정책(강소농)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A1 강소농은 개별농장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소득증대가 중심이 되지만, 3농혁신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복합적인 처방전임.

Q2 왜 3농혁신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타오르지 못할까, 그 원인은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첫 번째, 우리 도의 고질적 농업·농촌의 취약성임. 두 번째, 3농혁신을 순수하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정치화한다는 점. 세 번째,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자세. 네 번째, 대한민국에 농업정책이 너무나 많다는 점. 다섯 번째, 나름대로 타 시·도와와 차별성을 추구했지만 특별한 것이 아님. 비슷비슷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음. 3농 혁신을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새마을운동의 경우와 같이 농업·농촌·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릴 수 있는 3농혁신운동으로 방향전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A2 지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더 살피서 이후의 3농혁신 과정에 잘 반영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새마을운동 사례처럼 3농혁신 정책이 농촌, 농업에 새로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음.

Q3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중 행자부의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청양, 부여, 서천, 계룡시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3 중앙정부에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부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Q4 이번 교육전문직 공모요령 중 '민주시민장학사, 학교혁신장학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타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전문직을 뽑는지?

A4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은 있음. 그런 장학사를 뽑는 것은 아니고 업무 성격이 그렇게 한정된 것임.





장 기 승 의원

Q1 도내 4개 의료원 부채가 600억원 정도인데 천안의료원이 5억 2,800만원, 공주의료원이 2억 9,800만원으로 약 7억 8,000만원 정도 임금채불이 있음. 충남도가 2013년에 천안 의료원의 임금채불 24억원을 갚아 줬음에도 또 다시 임금채불이 발생했음. 직원들의 월급 부터 해결을 하고, 의료원 경영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람.

A1 병원 운영에 대해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의료원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Q2 충남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주 업무 담당 과장이 초등교장 출신 과장으로 바뀌었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약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초등교장 출신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A2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산하의 과장들은 초·중등 구분없이 협업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음. 천안 고교평준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3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내년 도 교육청에서 1,6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충남도가 도 교육청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대로 전입하지 않고있음. 이에 대해서 지사와 교육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A3 지방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5%를 높이도록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 하였고, 중앙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결손예산에 대해 별도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였음. 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448억원 정도임. 이 문제는 양 기관장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음.





김 종 문 의원

Q1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모두 인터넷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것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NIS)이라고 하고 2006년도부터 매년 5년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해 오고 있음. 올해로 2단계 NIS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인 스쿨넷사업이 시작됨. NIS 2단계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200억원을 통신회사에 통신비로 지출 했음. 또한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20억원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300억원 정도됨. 2단계 사업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통신사를 선정해 왔음. 계약서에 보면 통신요금의 30%를 재투자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재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A1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합동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단계 사업에 대한 재투자는 30%로 알고 있음.

Q2 200억원 통신비에 대한 30%재투자로 학교마다 600만원인 보안장비를 설치했음. 총 46억원 정도 지출했음. 재투자 방식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통신사 재투자비로 317개 학교에 설치한 보안장비가 미흡하다고 나타났음. 3단계 사업에서 보안장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안장비를 철거할 생각은 없는지?

A2 3단계 사업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전부 집선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검하겠음.

Q3 각 학교마다 3개 통신사가 서로 계약을 맺고 각 교육지원청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집선청'이 강원도는 17개 교육지원청 중 6곳, 전남 22개 중 9곳, 전북 14개 중 6곳, 경북 23개 중 1곳임. 우리는 14개 교육지원청에 집선청을 다 갖고 있는 데 전기료, 인력, 각종 유지비 등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3단계 스쿨넷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A3 충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집선청을 일원화하여 전기료, 통신비 등을 최소화하겠음. 현재 3단계 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음. 재투자 비율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홍 성 현 의원

Q1 2015년도 충남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총족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7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2020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비율을 4.7%에서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한 충청남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와 예산 확보 방안은? 이 계획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에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1 충남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전국지표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권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다만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할 것임. 지역별 어린이집 총족률을 감안하고 상의하면서 방안을 찾겠음.

Q2 충남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 · 논산시 · 공주시의 경우 95%가 설치된 반면, 천안시의 경우 25.6%만 설치하였음.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결 대책은?

A2 현재 도내 어린이집 CCTV설치율이 57%대인데 국비와 도비, 시 · 군비를 책정해서 좀 더 높이는 계획으로 추진 중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Q3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들어주기 보다는 경찰에 의뢰하여 CCTV 영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A3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Q4 교사에게 학생지도에 따른 방과후 수당 등 비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충남도내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A4 현직교원의 방과후 수당은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달라 일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교육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을 띠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음.



김원태 의원

Q1 충남도에서는 보조금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보조금 부담비율을 산정하여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것임. 충남도에서는 규정만 앞세우지 말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15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1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을 선정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것이 사업의 성격과 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예산 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음. 내년도 예산부터 우선은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률을 채우는 방향으로 갈 것임. 이를 위해선 기존에 도가 시·군에 내려 보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도의 법정 의무비율을 정하는것과 기존의 보조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하겠음.

Q2 도와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인사교류를 통해 충청남도 전체 공직자들의 역량 수준을 균형 있게 높여야 도민 전체가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2 앞으로 5, 6급 공무원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발굴하고 교류자에 대한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도 전입도 확대해 나가겠음.

Q3 행자부나 국민안전처 등으로 한정된 인사교류보다는 현대, 삼성, LG 같은 대기업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기업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A3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송 덕 빈 의원

Q1 황산벌 유적을 다른 시·군의 유적과 같이 평가하여 왕도 복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백제문화의 정신 계백의 혼을 함양,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인 황산벌과 청동리 산성, 산직리 산성을 백제왕도 복원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여 주기 바람. 백제의 훌륭한 문화유적들을 복원 정비하는 왕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백의 혼이 서려있는 유적도 포함시켜 자랑스러운 백제역사유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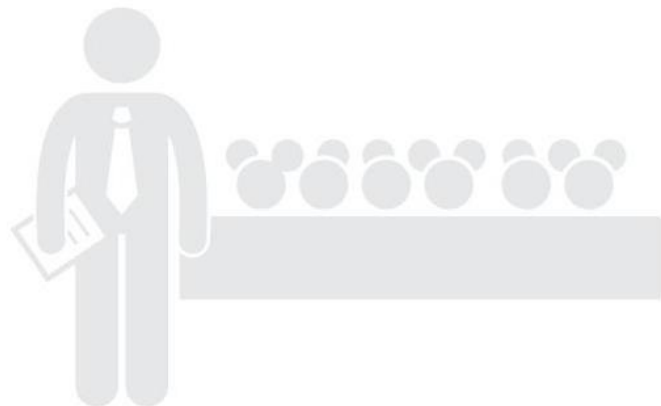
A1 황산벌 전투 유적지와 관련된 역사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연구나 고증이 필요함. 여기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황산벌 전투지와 청동리·산직리 산성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논산시와 협의토록 하겠음.

Q2 지자체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등을 통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고 새 출발의 기회도 주고 있음. 충남교육청에서도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2 현재 우리 교육청은 5급 이상에 대해서만 6개월의 공로연수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타 시·도 교육청의 운영 현황과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음.

Q3 도 교육청 인사운영에 있어 행정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기술직렬에 근무하는 현업 직원들의 승진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고 성과중심의 획기적인 인사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기 바람.

A3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시설팀을 3~5명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청의 경우 직렬·계급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신규 배치나 전보 등을 통하여 시설직 인력 배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임. 행정직과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전 낙 운 의원

Q1 논산 태성화학산업단지에 대한 4차 입지심의를 남겨놨는데 더 이상 기업주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A1 그런 방향으로 하겠음. 어떤 규정보다도 가장 먼저 상식에서 출발해야함. 기업을 하는 활동도 각각의 이윤추구활동이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은 자기 경제활동을 하는 것임.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는 서로 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함.

Q2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 등 서부북권역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남부권역의 인구, 제조업체수, 지역내 총생산(GRDP), 예산규모, 기업유치 실적, 사회복지분야 비용 등을 보면 충남도의 불균형발전이 심각함. 2025년도에는 집중도가 수도권보다도 훨씬 심각할 것임. 균형발전에 사회복지분야를 확대해야 하고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 도 위임사무를 남부지역에 배려하는 동시에 남부출장소를 설치해야 함.

A2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음. 균형발전 문제는 경제권역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음. 각각의 영역 속에서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음. 오히려 경제력 지수를 가지고 도내 불균형발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생활권역 내에서의 생활의 편의를 중심으로 우리 도내의 생활권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을 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음.

Q3 논산·서천지역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가 도내에서 제일 높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초등학교 1·2·3학년 과제물이 과제의 양과 횟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과함. 교육이 자칫잘못하면 사람을 못 되게 만들고 신분 상승은 커녕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과제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 바람. 봉동분교 폐교부지 매각과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은?

A3 학업 중도포기문제는 세밀하게 유형을 분석하고 집중 컨설팅 사례 관리를 통해서 줄여 나가겠음. 과제물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함. 봉동분교 폐교매각과 관련해서는 논산계룡교육장으로 하여금 중재를 강화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 기 철 의원

Q1 경기, 강원, 전북도 등은 서울에 인재육성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로 진학하는 충남은 서울에 학사가 없음. 또한 충남도는 대전 충남 학사에 매년 6억원을 지원하는데 대전시는 자립운영하고 있음. 서울 충남학사 건립 가능 시기와 대전 충남학사 자립운영 방안은? 우리 도 평생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충남도립대 중심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1 서울 충남학사 건립은 건립재원 대책 등을 마련해서 금년 내 계획 확정 예정임. 대전 충남학사는 학생기숙사비도 현실화하고 운영비 절감 등 도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평생교육원이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원을 독립해서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Q2 충남도에서 제정한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참전 명예수당을 시·군으로 전가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시행해 달라는 것이 참전 유공자들의 소망임. 참전용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A2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중앙정부 차원의 참전수당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음.

Q3 아산 현감으로 자립형 복지 효시 역할을 한 토함 이지함 선생의 사당과 걸인청을 복원하고, 재임 중 스토리텔링과 토정비결 등을 홍보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3 걸인청 복원은 내년에 철저한 문헌자료 검토 등 역사적 고증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사당 건립은 문중 후손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문중, 추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Q4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관련기술을 학교에서 배워 취직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내에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전입 될 수 있는지,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지?

A4 특성화고등학교와 인문계 간의 전·입학은 정원 범위 내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함.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산출은 지역별 학생 수와 산업수요를 판단해 정하는데 현재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매년 많이 줄고 있어 증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김 연 의원

Q1 보건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비율 개선안을 보면 어린이집 관련 사업비와 경로당 운영비·소모용품 지원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사의 환경개선비 등 보편적 사업 또는 유사사업 등임에도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제각각인데 그 이유는?

A1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이나 각종 복지 관련된 재원에 있어서 사업의 형태,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보조비율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Q2 6월 천안의료원의 매출 증감 현황을 보면 메르스 발병 이전의 병상가동률은 77.4%인데 비해서 메르스 발병기간의 가동률은 61.5%로 15.9%가 감소했음. 6월 한 달만 해도 2억 4,000만 원이 감소했음. 지금 천안의료원은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영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음. 그동안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함.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재활센터를 설립해서 그 기능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2 정부에서 메르스관련 추경을 편성 하면서 손실병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 2,505억원이 편성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 차액 부분에 대한 보전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음. 재활전문병원 설립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설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Q3 충남도의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등 부적절한 평가 기준 때문에 연구용역의 질 저하가 우려됨.

A3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음. 차제에 학술 연구 용역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 하겠음.



5분 발언

5 MINUTE SPEECH



유병국 의원 [본회의 2015. 9. 1]

의회사무처 업무처리 철저

-민주주의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



의원 10명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발의한 의안이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서 반려됐다. 지방자치법, 도의회 기본조례,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반려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만약 의회사무처가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외에 법률적 검토 권한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의원들은 의안을 발의하기전에 의회사무처에 법률적 검토를 통한 사전검열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의회사무처의 반려결정은 현대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생산적인 토론의 기회조차 원칙적으로 막는

처사이다. 도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원 발의권과 심의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그 심각성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홍재표 의원 [본회의 2015. 9. 1]

독립 운동가 업적 보존·계승할 기반 마련 필요성 제기

- 광복 70주년 맞이하여 문양목 선생 등 항일 운동가 조명...국권 회복에 노력 등
- 독립과 민족 자주권 회복 위해 노력...역사 기념 보존할 기념관 건립 필요

부패척결, 반제, 반봉건투쟁에 앞장선 태안군 출신 우운 문양목 선생은 강력한 항일 운동의 대표주자이다.

문양목 선생께서는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시작되자 손병희 선생과 함께 동학혁명군에 참여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 활동에 한계를 느낀 문 선생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으며, 동학 혁명군의 접주출신인 백일고 선생 등과 함께 1907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대동보국회를 결성, 국권 회복을 고취하는 등 강력한 항일 운동가로 위상을 키워나갔다.

문 선생은 척박한 삶 속에서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업적을 돌이켜 볼 때 이렇다 할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하신 문 선생의 기념관만큼은 건립돼야 한다.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독립정신을 바로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백낙구 의원 [본회의 2015. 9. 1]

도 산림환경연구소 도내 이전 촉구

- 매년 25억원 넘는 예산 투입...세종시에 있어 효율적 재산관리 어려워
- 8개 광역도 가운데 산림환경연구소 타 시·도 위치한 사례 없어...이전 서둘러야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도 산림자원의 연구와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1만322ha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1938년 대전시 유성구에 임업시험장을 설치·운영하다가 1993년 사방사업소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하였다. 1994년 공주시 반포면으로 이전한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부지가 2012년 세종시로 편입되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건물과 박물관 등의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31억원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에 투입된 예산은 총 60억원에 달한다.

세종시에 소재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매년 25억원이 넘는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세종시가 아닌 우리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적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8개 광역단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타 시·도에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세종시조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 도의 기관유치 정책과 발을 맞추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를 조속히 도내로 이전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이환 의원 [본회의 2015. 9. 10]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 노력 촉구

- 서산지역 불자들의 염원이 적혀있는 결연문 복장물에 남아있어
- 조속히 본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어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대마도 문화재 절도범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밀반입 되어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좌상은 고려 말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구들에게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좌상은 1330년 고려 충숙왕 때 서산지역 불자들이 중생 구제와 부석사에 영원히 봉안하겠다는 염원이 적혀 있는 결연문이 복장물에 남아있는 유물이다.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유물 중에 제작시기, 원소장처 그리고 제작이유가 분명히 남아있는 매우 보기 드문 귀중한 고대유물이다. 국제협약에는 소장처가 유물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좌상의 소장경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와 정황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좌상과 관련한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일본으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석사 좌상은 절대 일본에 반환되서는 안되고 하루속히 서산 부석사에 봉안해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점유지 이전소송은 물론 국제기구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좌상을 조속히 본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맹정호 의원 [본회의 2015. 9. 10]

대산항 자동차부두 시급하다

- 환황해시대를 준비하는 충남의 관문항 필요
- 최근 3년간 충남도내 자동차 수출액 53억 1,400만 달러로 충남의 핵심산업



현재 대산항은 전국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항 다음이 대산항이다. 현재 대산항은 총 27개의 선석이 운영 중에 있고 국가부두는 이 중 4개 선석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23개 선석은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씨텍 등 민간부두이다. 대산항이 환황해시대를 준비하는 충남의 관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부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국가부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자동차부두라고 확신한다.

충남에 생산지를 둔 아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28만1,280대, 동희오토는 28만2,717대를 생산 중이다. 충남도는 민간기업에서 정부를 대신해 대산항 자동차부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



오인철 의원 [본회의 2015. 9. 10]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형평성 논란 지적

-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편차 커...청양 111% 확보한 반면, 서천 18%에 불과
- 지역 간 운영 일지, 예산, 재정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재정립 촉구

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39대로 법정보유대수 132대의 29.5%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말 61대로 법정보유대수 132대의 46.2%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 82대로 법정보유대수 132대의 62.1%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배치를 살펴보면 청양 111.7%, 천안 99.6%, 당진 88.9%, 서산 81.4% 인 반면, 논산 16.0%, 서천 18.1%, 보령 22.7%, 부여 28.2%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5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투입예산은 22억 2천4백 만원으로 1대당 평균

운영비가 3,64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태안군의 경우 1대당 운영비가 1억 3천9백 만원으로 단지 2대의 운영비로 연간 2억 7천8백의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충남의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재정립, 15개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충남형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15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투입예산 실태파악, 15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다.



윤지상 의원 [본회의 2015. 9. 10]

작은 도서관 문화공동체로 전환할 때

- 단순히 지식 공유 장소에서 벗어나 문화와 정보의 균형 맞추는 문화공동체로 발돋움
-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용한 재능 기부 등 문화·역사·생태학습 등 소프트웨어 자원 강화해야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농촌계몽의 마을문고로 출발하여,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어오고 있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도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도서자료 전산화 미흡, 전문 사서인력 미확보, 시설노후,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장서관리, 독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은 예전처럼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학습하는 장소를 넘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도나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각 지역에서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각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작은도서관 현장자원봉사단 구성을 제안한다.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5. 9. 10]

내포신도시 불균형개발 해소 강력 촉구

-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개발 극히 부진
- 균형개발을 위한 특단의 노력 절실



행정부지사는 2013년 4월 29일에 부임하여 2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현직 행정부지사임에도 언론 등에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구설수에 올라 충남도의 행정혁신, 지치분권이 함흥차사가 된지 오래되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은 우리 충남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내년부터 개통되는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룡안항 대중국 시대를 앞두고 6,404억원의 충남 관광소득의 전진기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 공무원 가족 정주여건과 불균형

개발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택지개발 중 홍성권역 63%는 8개단지 9,272세대 중 3개단지 100% 입주완료, 5개단지 전체평균 75%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예산권역 37%는 허허벌판에 충남 지방경찰청숙소 1동이 전부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겨우 하나 승인 완료된 중흥건설조차 내년 5월에나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내포신도시 건설본부는 승인도 안 된 이자건설 800세대를 곧 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도지사는 마음이 콩밭에 가있고, 양 부지사는 정치판에 발을 디딜 듯 말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호한 인적쇄신을 촉구한다.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5. 9. 10]

금강·삽교 등 유역 통합 물 관리 제언

- 매년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 가속, 선진국 이미 유역별 통합 물 관리로 효과적 대처
-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라도 유역별 통합 물 관리 전환해야



우리나라는 홍수기에 강우 집중도가 매우 심하고, 가뭄철 비강우 기간의 강우량도 크게 감소하여 앞으로 가뭄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9mm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적은편이고, 2011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강수량은 6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우리 도는 지난 2012년에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등 서북부 지역에 104년만에 극심한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가뭄으로 논의 물마름

현상과 발작물의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청댐이나 보령댐, 용담댐에서 추가로 용수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수원을 개발·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물 부족 예상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물 절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도민홍보와 광역상수도간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확보에 노력하길 바라며, 비상급수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66

의회운영 위원회

99

“ 자치단체 차원 남북교류 협력 디딤돌 마련 ”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모임 첫발...
단절된 남북교류 협력 단초 모색 기대

타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 현황과 실태 파악,
사례분석해 충남도 추진 방식 도출 예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이기철 의원이 대표를 맡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의결했다. 이 연구모임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와 별개로 도가 자발적으로 교류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첫발을 뗐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자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남북교류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해 도에 적합한 추진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공동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조길행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강용일 의원



김동욱 의원



김용규 의원



맹정호 의원



유병국 의원



유찬중 의원



정정희 의원

“도 민간위탁 사무 선정과 평가 더욱 꼼꼼해진다”

민간위탁 사무조례 개정으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시켜야
안면도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키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78억2천여만원 제2회 추경안
심사 원안 가결

66
행정자치
위원회
99



행자위는 7일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해 위탁하는 사무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준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으로, 사무 위탁 협약에 관한 일반 규율을 정하는 동시에 수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했다. 또한, “구체적인 매각 대상지와 매각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2.8km²에 달하는 안면도 도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충남연구원 등의 전문가자문 등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78억 2천934만원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등 수정 가결 됐다.



백낙구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유병국 의원



윤지상 의원



이기철 의원



이용호 의원



조길행 의원



조치연 의원

66 문화복지 위원회 99

“도내 의료원 원장 순환보직 촉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
투명·효율성 높여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계적 서비스 지원 기대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석우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문복위는 7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했다. 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복위 위원들은 조례

개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 보류키로 했다. 위원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문제는 원장 순환보직제도 마련이다. 의료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 기구에 대한 수리 및 대여 등을 지원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이바지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농업 실태 파악 위한 현장 활동 돌입”

농업인 소득 증대가 충남 농업 살리는 지름길...
도민 소통 강화

66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99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농업경제환경위는 7일과 8일 양일간 지역 깊숙이 내재한 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충남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 의정활동에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강경첫갈시장과 농업 기술센터, 탐정호 등을 찾아 농업정책현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및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대와 농부 자재·사료값 상승, 자연재해, 기상 이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 정책추진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며 “도의 농업 정책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탐정호 현장 방문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 등을 논의했으며, “충남이 농업 도를 자청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체감은 높지 않다”며 “농업 지원 및 정책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문턱도 낮추고, 농업인, 농촌과 소통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66 안전건설 해양소방 위원회 99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연구 기능도 강화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력 보강 탄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에 관한 모든 정책 등을 연구할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으로, 센터에서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을 하는 동시에 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 또 도민 안전 의식 및 안전 환경 조사 등 도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연구하게 된다. 8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와 메르스 지원 국가추경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을 조정했으며, 이 예산을 노후 및 부족 차량을 보강하는 동시에 구조 구급 장비 보강,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 사업 등 열악한 소방 현장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안건해소위는 “노후소방차량 교체와 부족 소방차량 보강은 기동력 향상과 직결된다”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오인철 의원



이진환 의원



정광섭 의원



조이환 의원

“사회적 관심 부족 일선 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온양동신유치원, 충남예술고, 인애학교 등
분야별 애로사항 점검

66
교육
위원회
99



교육위는 7일과 8일 양일간 온양동신유치원과 충남예술고, 천안 인애학교, 천사유치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는 분야별 일선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칫 소외받기 쉬운 공·사립 유치원과 특수·예술 분야 학교 등으로 초점을 맞췄다. 일선 교육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설, 특색사업 등을 점검했다. 교육위는 향후 유아교육 기관의 역할 인식 및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의 발전방향 모색 및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는 데 중점을 모으고, “교육위원으로 처음 사립유치원인 천사유치원을 찾았다”며 “인성·돌봄 교육 등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현장을 두루 살피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비교 평가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시설을 둘러봤다”며 “학생들의 사회교육에 의정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홍성현 의원
8.19

도내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율 천양지차

⇒ 천안 25%에 그쳐...설치 의무화 시행 한 달 앞두고 예산 확보 등 비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일선 시·군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천양지차이다. 100% 설치를 완료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를 웃도는 자치단체도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도내 2007개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1155개소(57.7%)에 불과하다. 지역별 설치 편차 역시 보령은 전체 68개 어린이집이 완료한 반면, 천안은 718개 어린이집 중 184개소에만 장착했다. 당장 12월까지 100%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맹정호 의원
8.2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충남 교육시들

⇒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 맹비난 “농어촌 예산 도시에 더 주자는 것”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11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 비율은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밝혔다. 이럴 경우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출신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김용필 의원
8.26

충남 일부 유·초등학교 통학차량 사유화 우려 ‘갑질 논란’

⇒ 통학 외 무상운행조건 특약 조건 두면서 최대 48회기량 무분별하게 운행 등

충남지역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이 자칫 교사 또는 교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전락할 위기다.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을 계약하기에 앞서 무상운행을 강요하는 특약 조건을 강요, 통학차량을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다. 실제 도내 17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 계약에 앞서 학생들 통학 외 무상운행 조건을 달았다. 도내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758개교인 점을 고려할 때 23%에 달하는 수치다. 계약을 빌미로 한 학교들의 ‘갑질’ 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A유치원은 천안관내 현장학습을 위해 10회 무상운행을, 논산·계룡 B초교는 60km 내에서 연간 48회 무상운행을 강요했다.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통학버스가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역사 문화재 관광자원 승화” 행보 돌입

7.28 ~ 29 - 문화복지위원회

- 경주 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등 현장 방문...



“공주소방서 신축공사” 현장 점검

9.4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올 12월 완공 목표로 골조공사, 외부석재 공사 등 진행 사항 꼼꼼히 살펴
- 도민 안전을 위한 체력 유지와 신호체계 개선, 안전사고 유념 등 요구





총22건

조례안 16, 예산안 2, 동의안 2, 결의안 2

원안가결 14, 수정가결 5, 보류 3

처리구분	의안명	발 의 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의원: 전낙운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할 경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당 산업단지 지역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의원: 이용호 의원 (백낙규, 김동욱, 이기철, 유병국, 윤지상, 조치연, 조길행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 민간 사무의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규정의 미비로, 적정성 판단기준,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등 일반적인 위탁 사무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각각의 사무위탁 협약에 일반 규율을 정해야 하고, 일부내용의 누락 시 사후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례안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대표의원: 김응규 의원 (강용일, 김동욱, 유익환, 조길행, 김홍열, 김용필, 홍재표, 김문규, 이용호, 전낙운 의원)	원안가결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의원: 신재원 의원 (이종화, 김응규, 정광섭, 이진환, 오인철, 조이환 의원)	원안가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변경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의원: 김연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조례안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와 우리도가 공동으로 발굴한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처리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충청남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함. － 공개대상기관의 정의, 의무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공개 비용부담, 책임관의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삭제 등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 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운임 및 숙박비를 규칙으로 위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지방계약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관련 수수료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신설·조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 수수료 신설 및 조정: 문서·도면 등 열람, 전자파일 복제, 복제물 제작 등 외부 대행업체에 대행 의뢰 시 청구인과 실비 협의 부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신설 및 삭제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 부처명 정비 및 민원인 부담 실비 완화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도지사	보류	● 법제처와 충청남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6개) －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6개 개정조문 － 상위 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례 22개 개정조문 － 법령 상 근거 없이 도민의 권리 의무 행정규제 조례 폐지 2개 개정조문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11개 개정조문 －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14개 개정조문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보류	● 법제처와 충청남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임. － 제명의 '지방' 명칭 사용 삭제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 개정 － 보고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감경 규정마련

처리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 법제처와 충청남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35개) －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6개 개정조문 － 상위 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례 21개 개정조문 － 법령 상 근거 없이 도민의 권리 의무 행정규제 조례 폐지 3개 개정조문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29개 개정조문 －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23개 개정조문
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도지사	보류	● 법제처와 충청남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0개) －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2개 폐지 및 개정조문 － 상위 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례 5개 개정조문 － 법령 상 근거 없이 도민의 권리 의무 행정규제 조례 폐지 1개 개정조문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6개 개정조문 －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21개 개정조문
조례안	충청남도재난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 2014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
조례안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변경:「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용어의 의미 명확화, 변속·부가차로 설치시 곡선 반지름 완화, 민원처리 흐름도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이해 도모

처리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충남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등 2건의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임. <table><tr><th rowspan="2">안건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th><th rowspan="2">비고</th></tr><tr><th>종류</th><th>건수</th><th>면적(m²)</th><th>재산가액(천원)</th></tr><tr><td>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동</td><td>3,000</td><td>10,000,000</td><td>동의</td></tr><tr><td>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일반회계)</td><td>처분</td><td>토지</td><td>240필지</td><td>2,412,774.6</td><td>135,988,974</td><td rowspan="2">계류</td></tr><tr><td>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특별회계)</td><td>처분</td><td>토지</td><td>179필지</td><td>429,014</td><td>19,253,787</td></tr></table>	안건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건수	면적(m²)	재산가액(천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신축	취득	건물	1동	3,000	10,000,000	동의	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일반회계)	처분	토지	240필지	2,412,774.6	135,988,974	계류	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특별회계)	처분	토지	179필지	429,014	19,253,787
안건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건수	면적(m²)	재산가액(천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신축	취득	건물	1동	3,000	10,000,000	동의																													
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일반회계)	처분	토지	240필지	2,412,774.6	135,988,974	계류																													
인연도관광지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 매각 (특별회계)	처분	토지	179필지	429,014	19,253,787																														
동의안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관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의 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관리위탁 협약기간이 15.11.30일 종료됨에 따라 재관리위탁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예산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 산 안 : 5,846,522,467천원 －기 정 액 : 5,657,957,259천원 －비교증감 : 188,565,208천원																															
결의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홍성현 의원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은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적은 도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함, 또한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망언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이기철 의원	원안가결	●지난 8.31일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한 「한국의 외교가 사대주의로 일관했다」 등 망언적 사설에 대하여 기사삭제 및 사과 등을 촉구																															

연 · 구 · 토 · 론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7. 17)

폐기물 매립지 갈등 해결 위한 현장 활동 눈길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월 16~17일 양일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뭉쳤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이 매립장은 7천895t의 폐내 화물, 분진 등을 처리할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사업예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이던 찰라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 오인철 의원 /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다”

/ 유병국 의원 /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윤지상 의원 /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

연 · 구 · 토 · 론

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7.29)

하천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명품하천 조성 박차

충남도의회 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7월 29일 대전시 유성천과 청주시 무심천 등 선진 하천 정비 현장을 방문했다.

김응규 의원을 대표로 한 이 연구모임은 이날 타 지역 선진 하천에 대한 장·단점을 벤치마킹했다. 이 두 하천의 경우 최근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민 휴식처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도내 하천은 급속한 산업·도시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유실되거나 오염됐다”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필수인 물을 지키기 위해선 생태하천의 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재원 의원 ／ “하천을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을 개발, 지역민과 문화 역사를 소통하게 해야 한다”

／ 정광섭 의원 ／

“두 하천은 과거 지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하천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한 사례”로 “하천 복원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까지 향상 되는 것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 느꼈다”

／ 김동욱 의원 ／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오인철 의원 ／

“하천은 다른 SOC 사업과 달리 지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다”며 “복원을 통한 친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 · 구 · 토 · 론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8.27)

교육 정상화 위한 인성 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강화, 기반 구축 등 건의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은 8월 27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
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김문규 의원 /

“학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 윤지상 의원 /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연 · 구 · 토 · 론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정토론회 (7.22)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 등 반강제적 참여...



/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

지난 7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방과 후 학습 등이 수요자(학생)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참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1천686개 학교에서 446만9천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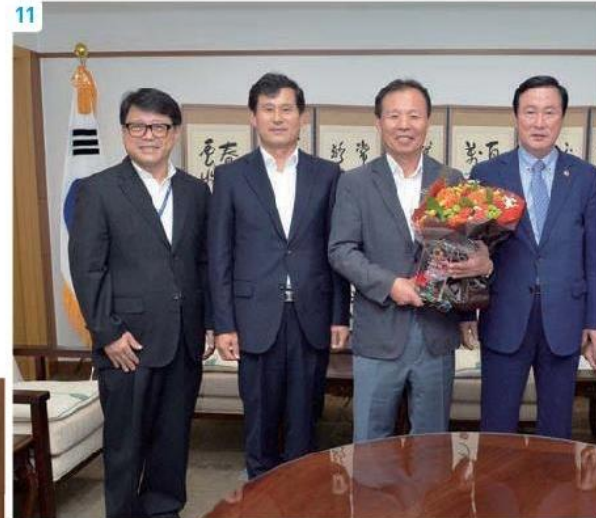




- 01 7월25일 김기영 의장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고향마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 02 7월27일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김원태 의원, 윤석우 의원, 김연 의원, 이공휘 의원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지원하는 '충남영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 03 7월29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예산군 정덕영 씨와 이무희 봉산면장을 접견하였다.
- 04 7월29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일행을 접견하였다.
- 05 7월29일 홍재표 의원의 안내로 태안군 태안읍 대화경로당 회원 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하였다.
- 06 7월29일 김기영 의장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민선6기 예산혁신 대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07 7월30일 김기영 의장은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열린 2015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했다.
- 08 8월11일 이종화 의원의 안내로 홍성군 서부면 판교마을 노인회 일행 34명이 의회청사를 방문하였다.

포토의정

- 09 8월11일** 윤석우 의원의 안내로 공주시 계룡면 주민 일행 30명이 의회청사를 방문하였다.
- 10 8월12일** 김종필 의원의 안내로 서산시 고북면 남정2리 주민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하였다.
- 11 8월12일** 유익환 부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
- 12 8월12일** 김종필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
- 13 8월13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노태철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 등 일행을 접견하였다.
- 14 8월13일**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내포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 15 8월15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충남도의원들은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총의사 참배 및 독립기념관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포토의정





16 8월17일 충남 당진시 송악고등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이 하계방학 진로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김명선 의원이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17 8월18일 충남도의회 유익환 부의장과 조길행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청 내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18 8월20일 김기영 의장은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19 8월24일 김기영 의장과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민주시민 의식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유학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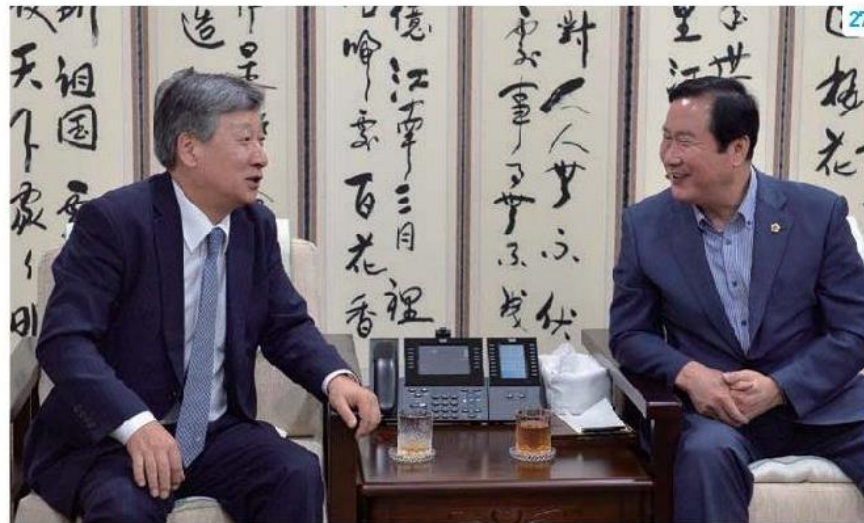
20 8월24일 유익환 부의장은 충남 당진시 삼교호에서 열린 '우리 농업 지키기' 2015 충남농민전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21 8월26일 김용필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충남지역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다.

22 8월26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조성계획에 관하여 태안군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포토의정





- 23 8월27일 김기영 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 24 9월1일 오배근 의원의 안내로 홍성초 6학년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운영 상황을 견학했다.
- 25 9월7일 김기영 의장은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충남도 학생기숙사 신축 개원식에 참석했다.
- 26 9월7일 김기영 의장, 오배근 의원, 김응규 의원, 신재원 의원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충남세종지구 JC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 27 9월8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충청투데이 김도훈 신임사장을 접견하고 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 28 9월9일 김기영 의장은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안내해 도의회 본회의장, 의원실, 상임위 회의장 등을 둘러봤다.

포토의정

의회



29 9월10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오상영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30 9월10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장기승 의원은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원들 일행을 접견했다.



31 9월11일 김기영 의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정부 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32 9월11일 김기영 의장, 강용일 의원은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산업단지 내에서 열린 2015년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사무처 소식

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의사 진행 실무
등 역량 강화 나서

정기 인사 및 정책연구원 인사 발령에 따른 조치로, 의회 실무 사례 접할 기회 마련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의안 처리 방법 등 실무 습득...업무 누수 차단

충남도의회가 7월 30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실무 사례를 접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사 진행 방법과 의안처리 실무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정기인사 및 정책연구원 인사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질적인 의회 실무를 쉽고 빠르게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직원간 인수인계에서 벗어나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의안 처리 방법 등 실무를 습득, 업무 누수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날 양천호 의사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정제석 주무관이 의사 진행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이은형 주무관은 의안 실무 과정과 향후 처리 실무를 강의했다. 김갑연 사무처장은 “대의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사 진행”이라며 “의사 운영 관련 기본 마인드 함양은 사무처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이번 교육이 의회 실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처소식



지금~ 그리고 여기! 10~11월



서산 국화축제

서산

10.30 ~ 11.08

충남 서산시 고북면 북남골길 31-1

서산국화축제는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에서 매년 10월 말 ~ 11월 초 서산시의 시화(市花)인 국화를 주제로 열리는 지역 축제이다.

서산시 문화관광과 041-660-3567



강경발효젓갈축제

논산

10.14 ~ 10.18

논산시 강경포구 일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공연과 다양한 젓갈을 시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체험행사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훈훈한 "인정"과 "덤"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041-746-5662



달빛문화갈대축제

서천

10.30 ~ 11.08

충남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갈대밭의 낭만과 달빛아래 펼쳐지는 서천 달빛문화 갈대 축제는 갈대밭에 어울리는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프로그램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갈숲마을영농조합법인 041-951-2077

<http://tour.chungnam.net>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팩스
(☎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 <http://blog.naver.com/cncouncil>
- Ⓛ <https://www.facebook.com/cncouncilNP>
- Ⓛ <https://mobile.twitter.com/council>
-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이메일 jungsnk@korea.kr

전 화 041-635-5102 팩 스 041-635-5009

우 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